

LPG유통구조 현대화계획 개선

— 동력자원부 —

정부는 LPG(액화석유가스) 容器충전소 시설 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계획을 87년 말까지 완료키 위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

동력자원부는 매년 20% 이상씩 급증추세에 있는 LPG 수요증가에 대비, 일반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LPG용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84년초에 LPG용기 충전소의 시설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87년말을 추진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

정부가 당초에 마련하였던 현대화계획내용을 살펴보면,

- 용기충전소의 시설현대화는 가정용 LPG를 용기에 의하여 충전·공급하고 있는 충전소의 경우 시설의 낙후성으로 안전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 충전소 자체내 충전작업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용기에 대한 기밀시험기와 도색설비등 8가지 시설을 1-3 단계로 구분하여, 8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내용이며,
- 유통체계 개선은 LPG용기의 소유(소비자)와 관리(판매소)가 2원화되어 있어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을 고려, 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에게 1원화시켜 유통과정에서의 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LPG 판매방식도 현행 중량판매 방식에서 가스계량기에 의한 용량판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소

비자와 공급자간의 정량 충전시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었다.

현대화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는 이 계획중 유통체계 개선계획이 용기확보에 따른 공급자의 자금부담과 용량판매를 위한 소비자의 계량기 설치부담 기중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정부가 이번엔 이를 대폭 개선·보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선한 현대화계획 내용은,

- 충전소의 시설현대화에 있어서는 전체 177개 충전소 중 아직까지 1-2 단계를 미설치한 일부 업체에게는 1-3 단계를 목표연도인 87년말 이전에 일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개선하고,
- 유통체계 개선중 충전사업자의 용기확보 문제는 공급자의 용기확보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하여 현찰구매방식을 지향하고,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보증금제에 의한 용기확보·대여를 추진토록 하는 한편,
- 용량판매제는 소비자의 계량기 설치부담과 실제로 충전소가 현대화될 경우 자동충전장치를 갖추게되어 일정량이 자동적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정량충전시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가스수요 증가로 공급자가 용량판매를 기피하게 되고 또한 용량판매제가 실제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예: 계량상의 오차, 요금환산방법의 복잡화, 도용 및 요금납

LPG유통구조 현대화계획의 중전대비 개선내용 비교

| 구 분 | 주요내용(현행) | 문 제 점 | 개 선 내 용 |
|----------------|---|---|---|
| 1. 容器충전소 시설현대화 | ○ 1-2 단계시설 설치 ┌ 1·2 단계시설 : 85 └ 3 단계시설 : 87년까지 설치 | ○ 설치의무 확화로 부작용 발생 - 1-3 단계 일괄 설치업소 및 현대화 미참여업소의 1-2 단계 설치문제대두(86년 9월말 현재 : 177개중 142개(80%) 설치) | ○ 현실에 맞도록 설치의무 재조정 - 1-3 단계 일괄 설치업소 및 미참여업소에게는 87년말까지 1-2 단계설치 유예 |
| 2. 유통체계 | ○ 용기소유·관리일원화 - 충전사업자가 기존 용기 구입 확보 ○ 용량판매 - 소비자가 계량기 설치 | ○ 공급자(충전사업자) 자금부담 과중으로 추진 기피 - 현찰구매에 따른 자금부담 과중 ┌ 용기확보 소요 : 약 550만개 └ 소요자금 : 약 800억원 ○ 소비자 자금부담 과중, 농어촌 가스 수요 증가 등으로 추진 기피 ┌ 소비자 : 계량기 설치부담(가구당 5만원) └ 용량판매시의 문제점 გადა : 계량오차, 요금환산복잡, 도용, 요금납부 시비등 | ○ 용기보증금제에 의한 용기확보 및 대여 추진 - LPG용기 : 보증금제에 의거 공급자가 용기확보 및 대여 ○ 소비자에게 용량판매제 선택권 부여 -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용량판매제 실시(중량판매와 용량판매 병행 실시) |
| 3. 기타사항 | ○ 미참여업소 처리문제 ○ 소비자 홍보 | ○ 현대화계획에 미참여한 업소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음. ○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현대화인식 결여 | ○ 미참여업소가 원할시 신청에 의거 LPG 판매사업(부관점)으로 사업전환 허가 ○ 적극적인 소비자홍보 실시(메스콤, 반상회 등) |

부시비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용량 판매제를 지양하고 소비자에게 용량판매제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행 중량판매제와 용량판매제를 병행,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건의 해오던 제반 문제점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자금부담이 대폭 해소됨으로서 정부의 LPG 유통구조 현대화계획 추

진은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 충전업계가 가스화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LPG 유통구조 현대화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충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신규참여를 규제하여오고 있고, 이번에도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금부담도 대폭 해소되도록 개선 보완한 점등을 고려, 87년말까지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하는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아가기로 했다. ☐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